“복지종사자 신앙생활 지침 만들자”

한국종교사회복지협, 박원순 서울시장에 공개 제안

서울시가 6월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가 신고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사단법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는 7월 2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종교 강요’ 구체적 요건 없는
서울시 신고센터에 비판 입장
인권침해 방지 취지에는 공감
영성 프로그램 개발 · 지원 요청

한종사협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된 동기에는 사회복지 태동기로부터 IMF사태 등 국가와 사회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종교 법인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었다”며 “종교 법인들은 각기 종교 본연의 가치와 목적을 정관에 명기하고 전문적인 영역의 복지사업 분야까지 반경을 넓혔다. 정부와 지자체 복지정책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 복지발전을 위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다”고 자평했다.

한종사협은 이어 인권침해 사례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특별신고센터 운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한종사협은 “신고대상 사례로 언급한 ‘강요’를 어떻게 볼 것인지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다. 종교 법인의 이념과 가치, 이에 따르는 순기능과 종교 위상을 존중하지 않고, 사전 협의도 없었다. 피해사례를 접수해 이를 사회문제화하면서 부정적으로 공론화하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종사협은 서울시에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종교와 신앙생활 존중을 위한 가이드 지침’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한종사협은 “이번 기회에 공유와 발전방향을 저해하지 않고, 서로의 신뢰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지침 마련을 제안한다”면서 “지침 배포와 교육을 통해 종교행위 강요 등 상처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종사협은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영적 돌봄, 소진 예방을 위한 마음의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종사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는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을 신고 대상이 아닌 협력과 발전 파트너로 인정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 증진과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종회의원 보궐 8월 29일 확정

직능 · 직선 등 5석, 입후보 등록 8월 5~7일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8월 29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7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59차 회의를 열고,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사진〉 현재 공석인 중앙종회의원은 제7교구 수덕사(주경 스님 사직), 제11교구 불국사(종민 스님 입적), 제17교구 금산사(일원 스님 사직), 제22교구 대흥사(법상 스님 사직), 직능대표 법제분야(초격 스님 사직) 등 총 5석이다.

이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은 8월 5~7일 총 3일간 진행된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2일이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은 8월 20~22일이다. 직능직은 8월 26일 열리는 직능대표 선출 위원회 회의서 선출되며, 직선직은 29일 각 교구본사에서 당선이 확정된다.

중앙종회의원 자격은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과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 주지 등은 겸직할 수 없다.

윤호섭 기자

“국가법령 피해사례 구제책 마련을”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용주사서 63차 회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현행 국가법령에 따른 사찰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총무원 집행부에 요청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경)는 7월 23일 제2교구본사 화성 용주사에서 63차 회의를 열고, 현재 조계종이 추진 중인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경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서 총무원 측은 종단 내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사찰관련 각종 규제법령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총무원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문화재 범죄 공소시효를 상향 조정하고, 도난 문화재 은닉 등의 범죄에서 몰수 면제를 받는 선의취득에 대한 입증요건 추가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법 적용으로 인한 규제로 일부 사찰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총무원에 따르면 1995년 건축법 개정 전까지 전통사찰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총무원은 이외에도 자연공원법을 비롯한 각종 국가법령에서 과도한 규제와 일원화되지 않는 행정을 수정하는 개정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총무원의 보고를 받은 본사주지스님들은 총무원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을 당부했다.

법령 제개정 추진위 활동 당부
문화재보호법 등 수정에 공감
백만원력 교구대회 일정 확정
전법사 활성화도 관심 갖기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종단에서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를 구성한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현재 가장 큰 현안이 국립공원에 대한 내용인 만큼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전통사찰 규제 등과 관련해 각 도별로 설치된 전통사찰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에 총무원 측은 “도 위원회를 존치하면서 문체부 산하에 전통사찰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63차 회의.

승려복지회는 본사주지협의회가 지난 회의서 국민연금보험료 가입 대상자 중 본 · 말사 주지를 제외하는 방향을 논의해달라는 요청에 “본인부담금을 높여 비소임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본사주지협의회는 지난 1월 회의서 주지소임자들은 사찰 경상비에서 의료비 등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소임자들에게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지원대상 제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서는 제36대 집행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교구별 대법회 일정도 일부 정리됐다. 현재 화엄사가 10월 5일, 월정사가 10월 11일, 은해사가 10월 19일로 행사를 확정했으며, 수덕사 · 동화사 · 불국사 · 범어사 · 통도사가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교육원은 종단 내외에서 다양한 전법 포교활동을 실천할 승려를 위촉하는 ‘전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각 교구가 포교활동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원에 따르면 전법사는 2018년 1기 84명, 2019년 2기 92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한편 본사주지협의회는 차기 회의를 9월 18일 오후 1시 수덕사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편백운 스님 ‘구종법회’ 태고종 내홍 확산

사간동 총무원서 결의문 채택
구종위원회, 삼권분립도 위협
신원 확인하며 출입 통제 나서



편백운 스님이 7월 23일 서울 사간동 총무원에서 개최한 구종법회.

태고종 중앙종회와 원로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신임 된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종단사태 수습을 위한 구종법회’를 봉행하고, 총무원 주도 아래 중앙종회와 원로회의 등 각급 기관을 새로 구성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제27대 총무원은 이를 “행정 권한조차 없는 전임자의 독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편백운 스님은 7월 23일 서울 사간동 총무원청사에서 ‘종단사태 수습을 위한 구종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편백운 스님을 비롯해 중앙승가강원장 탄해 스님, 정해정 전국신도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종법회에서 구종위원회를 구성하고, 편백운 스님의 불신임을 결의한 중앙종회의 해산과 제27대 총무원장 선출 무효를 주장했다. 구종위원회는 “편백운 총무원장 취임 초기 종단부채를 해결해 종단이 안정되려던 차에 종회가 월권과 파행으로 1종단 2총무원이라는 식물종단을 만들었다”며 “종단안정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종법회를 열고 대안을 제시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구종위는 △편백운 집행부에 전권 위임 △총무원장 불신임 원천무효 및 종회 해산 △제27대 총무원장 선출 불인정 △개혁종단의 틀 구성 등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와 원로회의를 새로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구종위원회는 태고종 종헌종법상 설립 근거가 없고, 선출직인 중앙종회를 구종위원회 차원서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해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종헌종법 위배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편백운 스님의 주장대로라면 구종위원회는 종단의 어느 기관보다 초법적인 권한을 갖는 셈이다.

또한 종정 임기가 만료된 혜초 스님은 사태 해결이 아닌 구종법회에 희망을 갖게 됐다는 법어를 내려 종단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혜초 스님은 지난 4월 종정 임기가 만료됐으며 원로회의서 재추대를 받지 못했다. 현재 태고종 종정은 공석인 상태다.

이 같은 구종법회에 대해 제27대 총무원은 “제26대 집행부는 아무런 행정 권한이 없다”며 “종도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무원 관계자는 “구종법회 참석자 대부분이 동방불교대학 학인들이다. 학인들은 온라인교육을 받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실습을 하는데, 편백운 스님은 학인을 볼모로 구종법회에 악용한 것”이라며 “학인들을 제외하면 법회 참석자는 20여 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무슨 권한으로 종단의 전권을 부여한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편백운 스님은 구종법회와 영산문화축제 등을 총무원청사에서 개최하면서 개인의 신분 확인을 거쳐 출입을 허용했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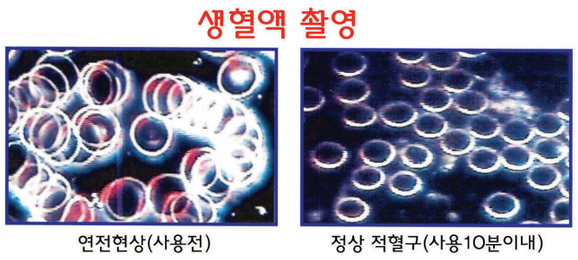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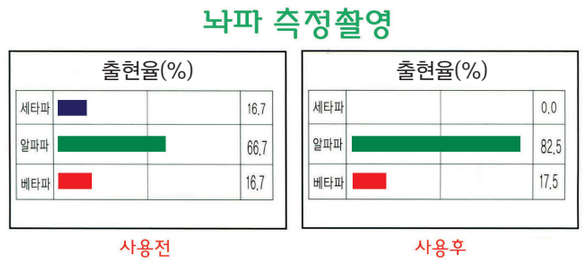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